

제16권 9호

2026. 5. 11 ~ 2026. 5. 25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긴 호흡으로 육성해야 할 인프라 투자 |
| 이슈분석 | 사적연금 시장의 변화와 금융회사의 과제 |
| 금융경영브리프 | IMF, 금융권 정보공유를 통한 사이버 사기 대응 촉구
기후리스크, ESG 공시를 넘어 재무리스크로 |
| 국제금융이슈 | 전쟁 이후 주목받는 고압경제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혜미(hmikim)
연구원	이시은(sieunyi)

논단

연구위원	손정락(urbang1)
------	--------------

이슈분석

연구위원	박지홍(jhpark525)
------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원	노혜련(hyeryeonroh)
연구원	하온누리(onrha)

국제금융이슈

연구자문위원	한상춘
--------	-----

금융지표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긴 호흡으로 육성해야 할 인프라 투자
- 04 **이슈분석** 사적연금 시장의 변화와 금융회사의 과제
- 08 **금융경영브리프** IMF, 금융권 정보공유를 통한 사이버 사기 대응 촉구
기후리스크, ESG 공시를 넘어 재무리스크로
- 12 **국제금융이슈** 전쟁 이후 주목받는 고압경제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긴 호흡으로 육성해야 할 인프라 투자*

손 정 략 연구위원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및 에너지 공급구조가 변화하면서 인프라 투자는 글로벌 트렌드이자 국가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첨단산업 육성과 연계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정부에서 추진 중이고, 금융사들도 생산적 금융 기조 아래 투자를 늘리고 있다. 투자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장기투자가 필요하다보니 국내 인프라 투자시장 규모는 아직 협소한데, 시장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사이의 효과적 역할분담과 함께 장기적인 민간 투자시장 육성방안이 필요하다.

❖ 글로벌 인프라 투자 경쟁 심화

인프라 투자 확대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첨단기술디지털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도 진행되면서 인프라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기업 비즈니스에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컴퓨팅/데이터센터, 통신망 등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structure)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부상하였고,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글로벌 에너지전력 투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산업 기반이 지정학 관점에서 재조명되고 권역국가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시도가 늘면서 도로·교통 등 전통 인프라 투자도 더욱 필요해졌다. 반등하는 투자수요에 대응하려, 미국, 유럽, 영국, 중국, 인도 등 세계 주요국들은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리는 한편 과감한 세계·금융 정책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산업기회 선점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글로벌
트렌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보고 글로벌 투자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5년간 150조원을 첨단 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투자할 계획인데, 투자재원의 1/3에 해당하는 50조원이 인프라 투·융자에 할당된다. 한편, 인프라 투자에서 재정지출과 더불어 민간 투자의 유치도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최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향후 5년간 100조원에 달하는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도 혁신경제, 균형
성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
인프라 투자를 계획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국내도 인프라 투자 확대 중이나 아직 시장규모 협소

생산적금융이 화두가 되며 금융사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전망

산업 변화에 더해 정책지원이 확대되면서 전통 인프라, 디지털, 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산업 인프라 투자는 국내 금융사의 주요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사들은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영업 전략에 포함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프라를 주요 투자영역으로 포함하였다. 투자계획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투자 외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을 제안하는 등 자체 투자사업도 발굴하고 있으며, 주요 인프라 사업자와의 전략 제휴를 확대하는 등 투자 기반의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정부도 민간 금융사가 인프라에 투자할 때 투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모 인프라펀드를 통해 시중자금이 인프라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내 인프라 투자시장은 부동산의 절반 이하로 작은 편

최근 금융사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국내 인프라 투자시장은 여전히 협소한 편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리츠가 25개에 달하는 것과 달리, 상장 공모 인프라펀드는 2개에 불과하다. 사모펀드도 부동산에 비해 규모가 작다. 부동산펀드와 리츠를 합산한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은 235조원에 이르지만 인프라 간접투자 규모는 100조원 가량¹¹⁾에 불과하다. 글로벌 인프라펀드의 보유자산(AUM)이 '24년 1.4조 달러에 달해 부동산 섹터를 추월했고, 해외에서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이 수 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펀드를 경쟁적으로 조성해 인프라 자산과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하면, 국내 투자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인프라는 장기투자가 필요하나 현금흐름이 안정적


자산의 특성상 인프라 투자시장 확대가 쉽지만은 않다. 비교적 단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동산 등 다른 대체투자와 달리 인프라는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운영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단기 투자성향이 강한 개인이나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투자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인프라는 개발·운영단계에 참여하는 기관이 우량한데다 여러 신용보강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다. 적절한 투자구조가 갖추어진다면 대체투자 시장의 주요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편,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하듯, 인프라 투자는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목표 달성에도 효과적이다.

[1]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은 '26.1월말 부동산펀드의 순자산과 리츠의 총자본을 합산하였으며, 인프라 펀드 순자산은 '26.3월말 특별자산펀드 순자산의 60%로 가정

❖ 공공·민간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민간 금융시장 육성이 중요

인프라 투자시장이 성장하려면 공공과 민간부문 사이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의 참여 확대는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해야 할 곳은 많은데 정부 재정여력의 한계로 투자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부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개선하는 단기 전략과 투자기반을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은 '25년 향후 10년의 인프라 투자 및 관리방안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에는 인프라 전략의 밑그림과 함께 실행 수단들도 제안하고 있다. 공공 금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고, 연금보험 등 장기 자본이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며, 공공과 민간 사이에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조달 방식들까지 계획안에 포함²⁾되어 있다.

민간 인프라 투자시장을 육성하려면 호흡이 긴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참여 가능한 민간 금융사의 범위도 한정적이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투자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투자 수요를 반영해 투자 가능한 인프라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기금·보험사 등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관투자자들이 인프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래가 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거래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들이 골고루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오랜 기간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성장전략으로 부상하면서, 인프라 투자시장의 확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당면 과제가 되었다.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등 지방 주도형 인프라 사업이 주요 정책 테마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실행수단도 마련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국민성장펀드의 40%를 지방에 투자하기로 한데 이어, 지역투자공사 설립, 금융사와 지자체 간 투자협약 체결 등 다양한 수단들이 공공·민간부문 양 쪽에서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조기에 실현되고 지역에 기반한 투자재원이 늘어날수록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지역 투자시장도 점차 확대될 것이다.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관건

장기적 민간 투자시장 육성책이 필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자체의 투자재원 확보도 과제

[2] 세부 내용은 건설산업연구원(2025.11), “영국 인프라 10년 전략과 한국 건설산업 혁신 방향” 참조

사적연금 시장의 변화와 금융회사의 과제

박지홍 연구위원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후자산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중 퇴직연금은 DC·IRP 확대, 개인연금은 연금저축펀드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수익률 등 운용 성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형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은퇴자 증가로 수령·인출 단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연금 사업은 단순 판매보다 가입 이후 관리 경험이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유치·적립에서 운용·수령까지 아우르는 장기 자산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주요 노후자산 축으로 성장

- 공적연금은 노후소득 체계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나, 개인별 가입 기간, 소득 수준, 수급 시점에 따라 실제 보장 수준에는 차이 존재
 - 공적연금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으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포함
- 또한,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간 차이,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공적연금만으로 은퇴 이후 현금흐름을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 은퇴 후 소득 공백, 장수리스크, 의료·생활비 고려 시 추가 노후자산 필요성 증대
- 이에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은퇴 전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나뉘며, 2025년 적립액은 약 860조원으로 추정

■ 노후소득 체계 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구분		주요 내용	적립 규모('25년)
공적연금	국민연금	- 기본 노후 소득 보장	약 1,500조원
	특수직역연금	- 특정 직역 종사자의 노후 소득 보장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사적연금	퇴직연금	- DB: 회사 적립&운용 - DC: 회사 적립 & 개인 운용 - IRP: 개인 적립&운용, 퇴직 시 퇴직급여 이전	약 860조원
	개인연금	- 세제적격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 즉시연금 등	

주1) 2025년 적립 규모는 2024년 데이터 및 2025년 일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

주2) 주택연금도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나 본 분석에서는 제외

자료 :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하나금융연구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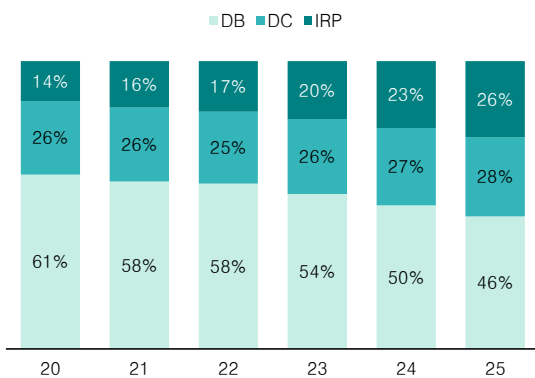
■ 퇴직연금은 500조원에 근접한 시장으로 성장한 가운데, DC·IRP의 비중이 점차 확대

- 2025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96.8조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사적연금 내 가장 큰 축으로 성장
- 제도 유형별로는 DB형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DC형과 IRP 비중이 확대되면서 DB 중심 구조는 완화되는 흐름
 - 비중 변화('14→'25) : DB 68.9% → 46.1%, DC 22.3% → 27.6%, IRP 8.7% → 26.3%
- 이는 임금 구조 및 시장 환경이 DC형의 이점이 부각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IRP도 노후 준비를 위한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수요 등으로 성장함에 따른 것
 - IRP는 퇴직급여 수령계좌 성격과 세액공제 목적의 추가 납입 성격을 함께 보유

■ 개인연금은 보험형 상품의 비중이 크지만 최근 성장세는 연금저축펀드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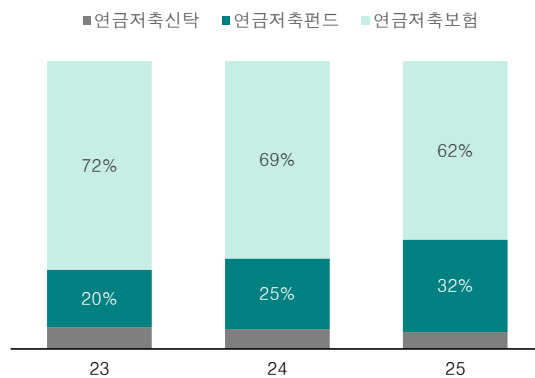
-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구성되며, 2025년 말 적립금 기준 약 370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 세제적격은 연말 세액공제 가능 상품을, 세제비적격은 연말 세액공제는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의미
- 세제적격 연금저축 적립금은 2025년 말 152조원을 기록했으며,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 연금저축펀드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연금저축보험 94.2조원, 연금저축펀드 49.0조원, 연금저축신탁 8.9조원 순
 - 연금저축펀드는 '24년 대비 36.3% 성장하며 전체 연금저축 시장 성장을 견인
-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2013년 고액보험료 일시납 연금에 대한 보험차익 과세 시행 등으로 위축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성장하는 모습
 - 만기자금 재유치,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퇴직연금 적립금의 제도 유형별 비중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세제적격 연금저축 적립금 내 상품별 비중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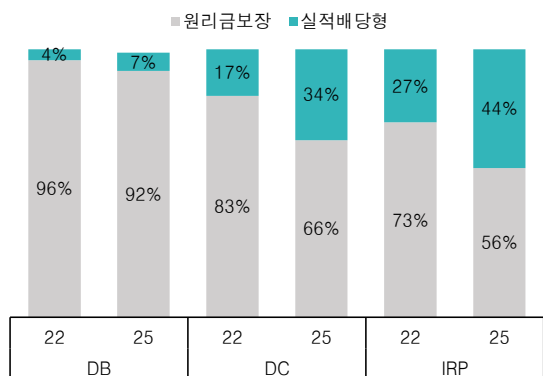
■ 수익률과 운용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투자형 상품으로 연금 자금 이동 확대

- 연금은 장기 적립 상품인 만큼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지만, 최근 수익률 등 운용 성과가 연금 상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
- 퇴직연금에선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개인연금에선 투자형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펀드가 크게 성장하는 등 자금 이동 현상이 확대
 - 2025년 기준 퇴직연금 내 모든 유형에서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DC·IRP에서 투자형 운용 선호 현상이 강화
- 이로 인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시장 내 사업자 간 경쟁에서 투자형 상품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의 존재감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
 - 퇴직연금 내 DC·IRP에서 증권사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연금에서도 연금저축펀드 판매가 증권사의 성장으로 연결

■ 고령화와 은퇴자 증가로 연금 수령·인출 단계로 진입이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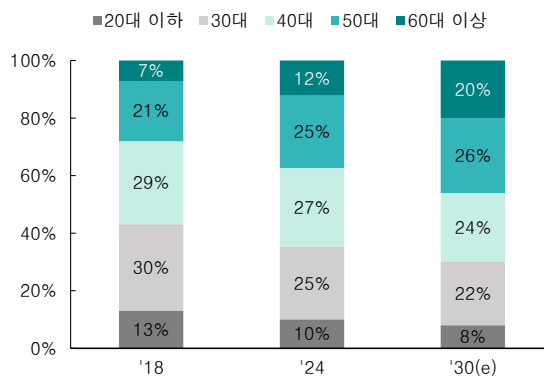
- 고령화로 은퇴 이후 생활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자산을 한 번에 소진하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활용해야 하는 환경 도래
- 또한,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가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가입자군도 점차 확대
 -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중 37%가 50대 이상으로, 인구 구조 감안 시 2030년에는 가입자의 약 절반이 연금 수령 시점에 직면할 전망
- 이에 사적연금은 신규 가입과 적립 확대뿐만 아니라 누적된 연금자산을 은퇴 이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단계의 중요성도 커지는 흐름
 - 수령 시점, 인출 기간, 생활비 활용 방식 등에 대한 관심도 함께 확대될 전망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별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가입자 연령 비중 추이 및 전망




주 : 2030년은 하나금융연구소 자체 추정치
자료 : 금융감독원

■ 정책 방향도 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 수령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로 변화

- 정책당국은 퇴직연금의 수익률 향상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기금형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
 - 올해 초 노사정 TF 공동선언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향을 발표했으며, 올해 중으로 세부 개편안 마련 및 법 개정을 추진
 - 또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원금보장형 쏠림 완화와 투자 상품 확대를 추진
- 또한, 연금 수령 기능 강화를 위해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 확대를 유도하고, 해지를 예방하기 위해 중도인출 요건 개선과 담보대출 활성화 등도 추진 검토
 - 퇴직연금 연금화 비율을 향후 5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추진
- 당국 정책의 방향은 가입자에게 합리적 운용 전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적립된 사적연금 자산을 노후 소득으로 연결 기능 강화가 핵심

■ 금융회사는 유치·적립 중심의 연금사업 모델을 장기 자산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그동안 사적연금 시장은 가입자 유치와 적립금 확대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향후 경쟁축은 운용 성과와 수령 단계 관리로 확대될 전망
 - 기존에는 거래 관계, 채널 접근성, 세제혜택 안내 등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가입 이후 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로 부상
 - 즉, 향후 연금 시장의 관심은 얼마나 적립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고 언제·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확장
- 투자형 상품으로의 자금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연금 자산에 대한 운용 성과 관리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
 - DC·IRP, 실적배당형 상품, 연금저축펀드 확대에 따라 자산배분, 성과 점검, 위험관리, 리밸런싱 지원 역량이 중요
- 또한, 고령화 및 은퇴자 증가로 연금 수령 단계에 진입하는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적연금을 은퇴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필요
 - 수령 시점, 인출 기간, 월수령액, 필요 유동성, 세후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은퇴 자산관리 서비스가 요구
- 향후 금융회사의 연금 사업 경쟁력은 계좌 유치나 상품 라인업뿐 아니라, 가입 이후 운용과 은퇴 이후 수령을 연결하는 장기관리 역량에서 차별화될 전망
 - 사적연금을 판매 상품이 아닌 장기 노후소득 관리 자산으로 인식하고, 적립·운용·수령 전 과정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중요 

IMF, 금융권 정보공유를 통한 사이버 사기 대응 촉구

노혜련 연구원

IMF는 급증하는 사이버 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기관 간 공조 필요성을 역설하며, 의심 데이터를 개별 기관 단위로 보유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상호공유 전략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했다. 금융 정보 공유에 수반되는 법적 규제가 장벽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북미에서는 민간 금융기관 간 자발적 공유를 독려하는 법적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추세이다. 국내는 현행 규제로 금융 정보 공유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국제 공조 체제 편입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 IMF, 금융 사이버 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전략 전환 제언¹⁾

- IMF는 3월 보고서 및 4월 봄 회의에서 162개국·20개 산업 대상 분석 결과 공개
 - 2014년부터 2023년간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가 약 3배 증가했으며, 그 중 10%가 금융업에 집중
- 금융기관 간 정보 비대칭 및 단절이 집단적 사이버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역량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하여, 기관 간 의심 활동 정보 공유를 촉구
 -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동조
-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기관 간 정보 공유의 장벽으로 작용해 민감한 의심 활동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가둬놓는 ‘사일로’ 현상이 고착화

■ 중소형 은행에 피해가 더욱 집중되나, 대형 은행도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


- 금융 사이버 사고의 87%가 非 G-SIB(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은행에 집중되어 있어 보안 구조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금융기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
 - IMF는 정보 소외 계층인 중소형 은행들이 글로벌 데이터 공조 체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적 보안 거버넌스 구축을 당부
- 고도화된 상호연결성으로, 개별 기관의 보안에 문제 발생 시 연쇄 반응 위험
 - 2023년 Lockbit 랜섬웨어 조직의 공급망 업체(IMS) 공격으로뱅크오브아메리카 고객 5만 7,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서드파티를 통한 공급망 공격의 위험성을 입증

[1] “IMF urges banks to share data to fight fraud”, American Banker, 2026.04.17

■ 북미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간 자발적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도록 법적 안전망 지원

- 미국은 2001년 애국법(PATRIOT법) 314(b) 조항을 근거로 자국 내 금융기관 간 자금세탁 의심 활동정보 공유 시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 면책을 제도적으로 보장
- 2025년 9월 국제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지침을 추가 발표해 정보 공유 범위를 해외 계열사·지점까지 확대하며, 민간 주도 정보 공유 체계의 법적 기반을 강화
- 캐나다 FINTRAC(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도 2025년 11월 민간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지침을 수립하여 FINTRAC 검토 및 OPC(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동 강령 준수를 전제로 정보 교환을 허용

■ 국내 금융권은 여전히 법적 한계가 있어 글로벌 공조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우선

- 현행 법체계 내 금융기관 간 고객 거래, 사기 패턴 등 금융 정보 직접 공유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
 - 금융보안원을 경유한 간접적 기술 정보(공격 IP, 악성코드 패턴 등) 공유 경로는 존재하나, 실시간 위협 탐지 및 고도화 된 데이터 공조 체계 합류까지는 어려움
- 양국 간 법적 프레임워크가 맞아야 국경을 넘는 금융 정보 공유가 가능하므로 국제 데이터 공조 체계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 

■ 북미권 금융기관 정보 공유 법적 근거 비교

명칭	PATRIOT법314(b)조*	국제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지침**	민간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지침***
제정 기관	미국 의회	미국 FinCEN 외 3개 연방기관	캐나다 FINTRAC
시기	2001년 10월	2025년 9월	2025년 11월
성격	법률 기반 안전항	법 314(b)조 해석 지침	자발적 참여 기반 운영 지침
목적	9.11테러 후 테러자금·자금세탁 차단	국제 불법 금융활동 탐지·차단	자금세탁·제재 회피 적발 강화
정보	거래·고객·계좌·개인식별정보 SAR(의심 활동 보고서) 기초자료	좌동	구체적 항목은 기관별 상이
공유 대상	자국 내 등록기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자금서비스업체 · 카지노 등 도박업체	미국<=>해외금융기관·계열사 · 해외 계열사·지점 · 환거래 은행	자국 내 보고 의무기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부동산업자, 자금서비스업체 · 회계사, 공증인 등
보호	조건 충족 시 민사 소송 면제 단, 형사 책임은 별도	미국 법인 한정, 타국 금융기관은 각국 법 적용	조건 충족 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음

*FinCEN, USA PATRIOT Act Section 314(b)

**FinCEN, Cross-Border Information Sharing by Financial Institutions and SAR Confidentiality

***FINTRAC, Private-to-private information sharing

기후리스크, ESG 공시를 넘어 재무리스크로

하 온 누 리 연구원

지난 4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영국 금융감독당국(FRC, PRA)에 HSBC의 재무제표 회계와 감사의 적절성 검토를 공식 요청하였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물리적·전환리스크와 같은 기후 관련 위험 요인을 재무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고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기후리스크가 더 이상 단순한 ESG 공시 이슈에 머무르지 않고, 회계·감사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핵심 재무리스크로 격상되었음을 시사한다.

■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HSBC의 재무제표·감사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감독기관에 요청^[1]

- HSBC는 기후변화를 ‘주요 리스크(Principal Risk)’로 공식 인정하면서도, 연차 보고서에서는 ‘단기~중기 재무 영향이 제한적’이라 모순적이라 서술
- 4°C 기온 상승의 시나리오에서도 최소 수준의 예상 손실만을 산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리스크 평가가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
 - 특히 HSBC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기상 이변이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위험을 미반영
 - 여신 심사 시 기후리스크를 제외함으로써 화석연료 관련 대출의 수익성이 과대평가 되는 반면, 저탄소 대출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자본배분 왜곡 현상 발생

■ HSBC는 기후리스크 평가 모형의 논리적 한계 및 회계의 신뢰성 훼손을 지적받음

- 2030년 이후 기후변화의 재무적 충격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시계열적 가정을 내세우지만,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량적 근거가 미흡
- 또한 은행의 현재 대출이 미래 기후리스크를 확대하는 구조를 간과하고 있음
 - 대출 의사 결정이 과도하게 탄소집약적일 경우, 미래의 기후 불안정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재무리스크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초래
- 회계처리 투명성, 외부감사 독립성 등 지배구조 기반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
 - 외부 감사인 PwC가 수행한 기후리스크 검증 방식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
 - HSBC 이사회 의장이 감사위원회 의장을 겸직하는 현 지배구조는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의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

[1] “Investors urge UK audit watchdog to scrutinize HSBC’s climate accounting”, Reuters, 2026.0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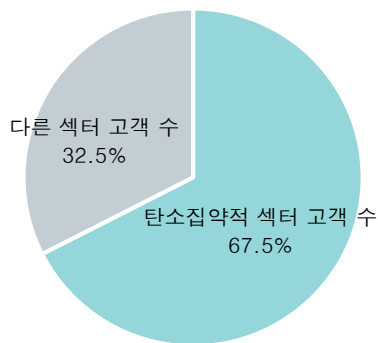
■ 기후리스크가 은행의 재무리스크 영역으로 전환되며, 회계·감사의 책임 강화를 요구

- 투자자들은 기후리스크가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손실흡수능력 등 핵심 금융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무리스크 요소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
 - 과거 기후리스크 위상이 비재무 영역 공시로 인식됐다면, 현재는 금융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재무리스크로 전면 재조명됨
 - 英금융당국은 '25년 TCFD 기반 기후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하였고, ISSB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26년 독자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UK SRS를 도입을 확정
- 이번 이슈 제기는 HSBC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은행과 외부 감사인의 기후리스크 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규범화하려는 접근임
 - 기후 시나리오에 기반한 민감도 분석 의무화, 자체 평가 방법론의 투명한 공시, 고강도 기후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등을 요구

■ 기후리스크가 핵심 재무리스크로 격상되며, 스트레스 테스트 및 감사 가이드라인 고도화 필요

- 기후 변화가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자본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재무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재무적 영향을 계량화하는 평가 체계 구축이 시급
 - 대출차주 채무불이행, 부실채권 회수율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고, 이를 자본관리와 여신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체계 마련
 - 미래의 환경정책 변화와 산업 탈탄소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손충당금 산정 기준과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기후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의 신뢰성을 점검할 필요
 - 외부 감사인의 기후리스크 회계처리 및 자산손실평가 등에 대한 검증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감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 명확한 지침과 규제 프레임워크로 기후리스크 측정 및 공시 일관성을 제고

■ HSBC의 고객 구성 비중



■ UK SRS 기후 관련 주요 요구사항

구분	내용
도입	2027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예정
거버넌스	이사회·경영진의 기후리스크 감독 책임 공시
분석내용	물리적·전환리스크가 사업전략과 재무에 미치는 영향과 시나리오 기반 회복탄력성 입증
위험관리	기후리스크를 신용·유동성리스크 관리에 통합
지표	Scope1-2-3, 감축목표, KPI, 파이낸스 배출량 등
특징	도입 첫해부터 Scope 3 공시를 강력히 권고

자료 : HSBC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5

자료 : GOV.UK

[2] "What HSBC isn't telling us about climate resilience: long-term investors seek a review by the FRC", Sarasin&Partners, 2026.04.22

전쟁 이후 주목받는 고압경제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한 상춘 연구자문위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생한 지도 2개월이 넘었다. 전쟁 발생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중시도 큰 폭의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와 중시 모습은 다른 양상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미국 경제는 2%로 잠재 수준을 웃돌았고 한국 경제도 연율로 6%가 넘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주가와 코스피 지수도 전쟁 이전 수준을 넘어선 지도 오래됐다.

∴ 전쟁 장기화 불구, 왜 세계 경제와 글로벌 중시는 괜찮나?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 2개월간 예상과 다른 움직임을 보인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번 전쟁 피해가 1970년대 발생했던 두 차례 중동전쟁, 지난 4년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액을 합한 것보다 크다는 평가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이 실물을 주도하는 뉴노멀 환경에 따른 자산효과는 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충

가장 먼저 금융과 실물 경제 간의 인과 관계가 바뀐 뉴노멀 여건을 들 수 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은 실물 경제를 반영(following)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금융이 실물 경제를 주도(leading)하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도 주가는 따로 노는 수수께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이 주도하는 여건에서는 주가 등이 상승하면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발생해 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완충시킬 수 있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중앙은행(Fed) 전 의장은 미국 국민의 주식소득이 1달러 증가하면 소비가 304센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국민도 아직까지 부동산이 높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효과가 높아지는 추세다.

실물경제 각 부문에 초과수요를 일으키는 고압경제도 세계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또한 실물 경제 자체적으로도 세계 경제 주도국이 전쟁 전부터 ‘고압경제(HPE·High Pressure Economy)’를 실험해 온 점도 빼놓을 수 없다. 1960년대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아서 오쿤 예일대 교수가 제시한 HPE는 실물 경제 각 부문에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 전쟁에 따른 피해를 완충시키고 경기와 증시를 부양하는 정책 처방을 말한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HPE의 핵심인 노동시장부터 살펴보면 재정과 금융 완화를 통해 노동수급 여건에 인위적으로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면 임금이 올라간다. 임금이 ‘그냥 쉽(take a break)’ 만족도보다 높아지면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자 모두 고용시장에 들어온다. 취업자도 생산성과 임금이 높은 자리로 이동하는 고용사다리 효과(employment ladder effect)도 발생한다. 아서 오쿤 교수는 1960년대처럼 노동 집약적 산업이 주도될 때 실업률을 1%를 낮추면 성장률이 3%까지 높일 수 있다는 오쿤 계수를 고안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지금도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 이하의 저개발 국가에는 그대로 적용된다. 3만 달러 이상의 자본 혹은 첨단기술 집약적 국가도 오쿤 계수가 2배 내외로 높게 나온다.

결국 HPE는 실물 경제 각 부문에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 특정국의 총수요 항목별 성장 기여도 중 정부 지출, 민간 소비, 설비투자를 모두 증가시킨다. 상품시장 등에 초과 수요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져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 지출에 따른 케인지언 승수 효과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체적인 성장률은 크게 높아진다.

HPE는 베트남 전쟁으로 점철됐던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 정부와 린든 존슨 정부까지 이어지는 미국 경제와 증시의 장기호황을 이끌었다. 그 후 전쟁, 코로나 사태와 같은 디스토피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HPE가 실험되다가 작년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와 올해 2월 총리직을 걸고 중의원 선거를 통해 더 강력해진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상용화하고 있다. 정도 차가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쟁 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 고압경제의 이론적 배경인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란?

고압경제(HPE)의 이론적 배경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으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출발은 예일대에서 화폐 경제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토빈이다. 정책적으로는 아서 오쿤, 로버트 솔로, 케네스 애로 교수 등과 함께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윌리엄 노드하우스, 로버트 실러 교수와 함께 재닛 옐런 전 Fed 의장이자 재무장관이 계승하고 있다.

전체적인 기조는 경기 침체, 금융위기 극복, 전쟁 후유증 처리와 같은 단기 과제 해결은 케인지언 이론을 선호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과 같은 장기 과제는 신고전학과 이론을 받아들인 독특한 정책 처방

고압경제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일본 다카이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상용화

고압경제의 이론적 배경인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단기로는 케인지언을, 장기로는 신고전학과 이론을 수용

패키지다. 즉, 단기 과제는 총수요와 총공급 곡선으로 이해하고, 지속 가능 성장과 고용 창출 등의 장기 과제는 토빈과 로버트 솔로 모델을 선택했다.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유용하며
장기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

정책 수단은 초기에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보다 더 유용하다고 봤다. 이 때문에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자 폭이 커지더라도 ‘재정 건전화’ 틀은 깨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물가가 어느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경제 활력을 북돋는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 목표인 장기 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물적자본, 인적자본,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통화당국은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해 기업 이윤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세율을 높여 저축과 투자가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1960년대와 1990년에
미국 경제는 전례없는
호황을 맞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토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1960년대와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을 구가했다. 토빈 교수가 케네디 정부에 정책 자문했던 1961년 이후 106개월 동안 확장 국면이 지속됐다. 1990년대에는 예일대 교수들이 다시 클린턴 정부와 손잡으면서 확장 국면이 2001년 3월까지 120개월 동안 지속됐다. 한편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옐런 재무장관은 거시경제 기조를 ‘분배’보다 ‘성장’, 목표는 ‘물가 안정’보다 ‘고용 창출’에 우선순위를 뒀다. 운영 방식은 ‘준칙’보다 ‘재량적’ 방식, 시장과의 관계는 ‘우월적’보다 ‘친화적’으로 가져갔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비중은 후자에 무게를 두되 Fed와의 협조를 중시해 나갔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도
활용되었는데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대표적인 사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미국 이외 국가에서도 활용됐다. 1990년 이후 ‘엔고(高)의 저주’에 걸려 20년 이상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의 발권력을 통한 엔저 유도 권고를 받아들여 ‘잃어버린 30년’ 우려를 차단한 아베노믹스가 대표적인 예다. 고이치 교수는 토빈의 제자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지출은 늘리고 통화정책 기조는 중립적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기간에도 추경을 편성했다. 반면 통화정책은 이창용 체제에서 신현송 체제로 교체되는 과도기와 맞물려 적극적이지 못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과 다른 듯하지만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 HPE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전쟁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막대한 군비가 들어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후유증은 재정 파탄 우려다. 트럼프 정부처럼 2026년 예산안 처리가 안돼 임시 예산안으로 연명하는 여건에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처리되지 못하면 미국은 디폴트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에 몰릴 수도 있다.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상 전쟁 이후 재정정책에서 문제되는 것은 세수보다 세출 부문이다. HPE를 주도해 나가는 트럼프와 다카이치 정부는 토마스 피케티 공식대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빚내서 더 쓰더라도 재정적자와 국가부도 우려는 없다는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종자로 알려진 워런 모슬러가 주장한 현대통화이론과 같은 논리다. 또한 세수 부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구상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처럼 중간선거를 앞둔 여건에서 표심과 직결되는 각종 세금은 감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처럼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은 여건에서 세출을 늘리는 대신 세수를 줄이면 피케티 공식대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다 하더라도 디폴트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재정정책을 추진하면 ‘재정적자-포퓰리즘 악순환 고리(deficit-populism deep loop)’에 빠질 수 있는 점이다. 세계 3대 평가사는 미국의 국가채무가 높은 점을 들어 신용등급을 계속해서 낮춰왔다. 앞으로 이란과의 전쟁 이후 국가채무를 더 늘리면 신용등급은 추가적으로 강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가채무를 증대시키는 재정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2012년 아베 신조 정부 이후 다카이치 정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HPE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경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 일본 경제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0.5% 내외까지 떨어졌다. 총공급 면에서 단순생산함수를 이용해 잠재 성장 기반을 따져보면 노동 섹터는 인구절벽과 저출산·고령화가, 자본 섹터는 토빈 q 비율이 1을 밑돌아 생산성이 낮다. 총요소생산성도 정치권의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획기적인 구조개혁이 없으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총수요 면에서도 항목별 소득 기여도로 저성장의 원인을

고압경제는 포퓰리즘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가채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살펴보면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경제를 지탱해 왔던 양대 항목인 민간 소비와 순수출 기여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출 항목도 GDP 대비 270%에 달하는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오히려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은 구축 효과가 우려된다.

또한 국민경제 3면 등가 법칙(생산=분배=지출)으로 총공급과 총수요를 연결하는 각 부문 간에도 병목(bottle-neck)이 심하다. 생산과 분배 간에는 SOC 미확충에 따른 전후방 연관효과가 떨어져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분배와 지출 간에는 일본 국민의 높은 저축률로 절약의 역설에 걸린 지 오래됐다. 지출과 생산 면에서는 해외 누수 현상이 의외로 심각하다.


다카이치 정부가 이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제3의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최대 돈맥 경화 변수인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부(負)의 저축세 도입을 미뤄서는 안된다. 케인스언의 균형재정승수가 1이라는 점을 착안한 ‘간지언 정책’도 고려해야 할 때다. 산업연관표상 병목 현상은 풀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더 강력한 靚증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美·이란 전쟁 이후 트럼프發 국가자본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美·이란 전쟁 전후
처리와 함께 트럼프發
국가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에 대한 도전 요인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일본 경제와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연 트럼프 정부는 전쟁의 뒤처리를 잘할 수 있을까? 체제상으로 미국의 상징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양대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국가자본주의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문제의 발단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을 지분으로 되돌려 받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발상 때문이다. 주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증시 정책의 원칙상 지분을 확보한다는 것은 국가가 민간 기업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시장경제의 최대 도전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1기에는 대외 경제정책부터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였으며 2기 들어서는 타국의 이익까지 빼앗는 돈로(DonRoe)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대내 경제정책은 시장과 통화정책보다 국가와 재정정책의 역할을 중시한다. 재정도 감세를 통한 공급 중시 경제학과 빛내서 더 쓰자는 현대통화이론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변형한 고압 경제(HPE)다.

트럼프노믹스 2.0을 지탱하는 이론이 ‘자본주의 4.0’ 시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경제이론으로 구분한 자본주의가 앞으로 상당 기간 혼돈의 시대를 겪을 것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정국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인 국민 후생 증대를 위한 최선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뒤처리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대 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자본주의를 철회할 수 있을까? 앞으로 3년은 더 기다려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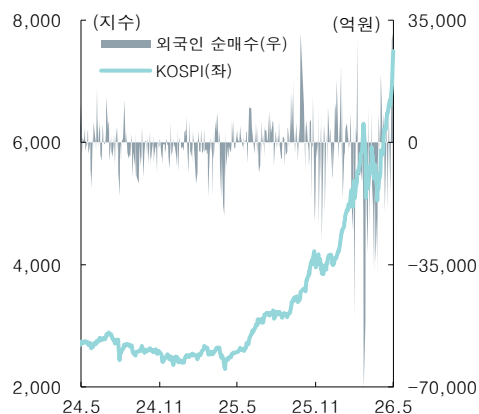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25월말	2.63	2.81	2.79	3.48	2.95	3.24
4월말	2.55	2.81	3.14	4.25	3.60	3.78
5월 1일	-	-	-	-	-	-
5월 4일	2.49	2.81	3.15	4.27	3.62	3.80
5월 5일	-	-	-	-	-	-
5월 6일	2.49	2.82	3.14	4.25	3.60	3.79
5월 7일	2.55	2.82	3.11	4.20	3.55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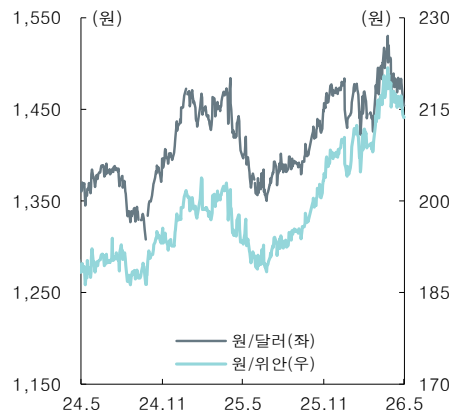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25월말	4,214.2	132,135	408	-4,886
4월말	6,598.9	358,086	685	-14,622
5월 1일	-	-	-	-
5월 4일	6,937.0	426,960	873	29,457
5월 5일	-	-	-	-
5월 6일	7,384.6	600,004	996	31,096
5월 7일	7,490.1	511,125	767	-67,173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4년말	1,472.5	934.1	201.4	1,522.7
'25월말	1,439.0	916.1	204.4	1,686.3
4월말	1,483.3	947.1	217.2	1,740.0
5월 1일	-	-	-	-
5월 4일	1,462.8	930.3	214.2	1,710.2
5월 5일	-	-	-	-
5월 6일	1,455.1	930.2	213.6	1,709.3
5월 7일	1,454.0	926.5	213.8	1,7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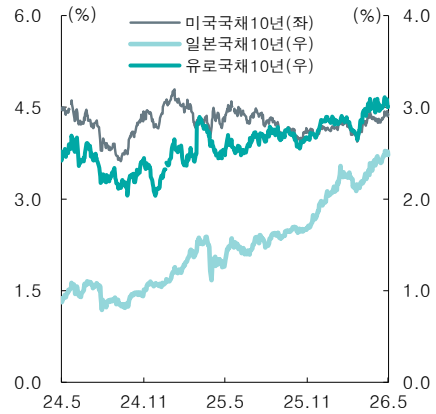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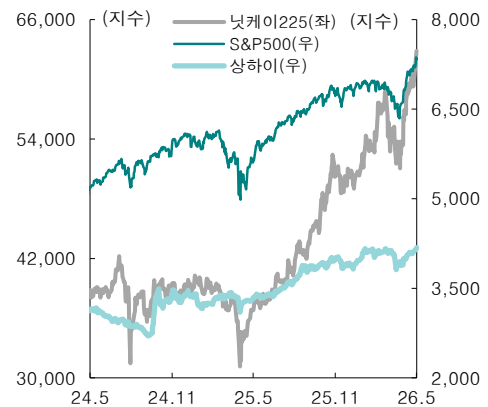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4년말	4.33	4.69	4.24	4.57	1.10	2.37
'25월말	3.64	4.01	3.47	4.17	2.07	2.86
4월말	3.64	3.67	3.87	4.37	2.53	3.04
5월 1일	3.64	3.67	3.88	4.37	2.52	3.04
5월 4일	3.64	3.67	3.95	4.44	-	3.09
5월 5일	3.64	3.67	3.94	4.42	-	3.06
5월 6일	3.64	3.67	3.87	4.35	-	3.00
5월 7일	3.64	3.67	3.91	4.39	2.48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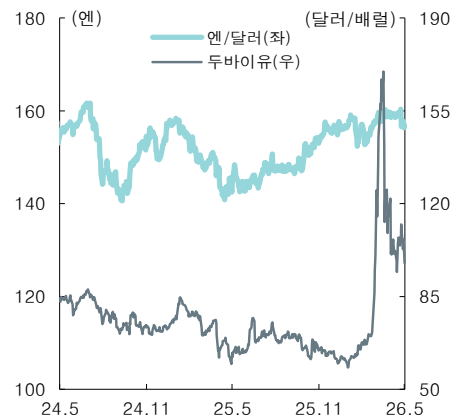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25월말	6,845.5	50,339.5	3,968.8	5,791.4
4월말	7,209.0	59,284.9	4,112.2	5,881.5
5월 1일	7,230.1	59,513.1	-	5,881.5
5월 4일	7,200.8	-	-	5,763.6
5월 5일	7,259.2	-	-	5,869.6
5월 6일	7,365.1	-	4,160.2	6,027.1
5월 7일	7,337.1	62,833.8	4,180.1	5,972.7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25월말	156.63	1.175	61.6	4,341.1
4월말	156.61	1.173	112.2	4,629.6
5월 1일	157.06	1.172	-	4,644.5
5월 4일	157.15	1.169	102.8	4,533.3
5월 5일	157.80	1.169	106.6	4,568.5
5월 6일	156.35	1.175	103.7	4,694.3
5월 7일	156.85	1.172	97.6	4,713.4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9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6년 5월 8일 인쇄

2026년 5월 11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9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